

공청회자료집

2012. 11. 1. 14:00 / 페럼타워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입니다.

정책현장에서 청소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행복하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을 펼치는데 근간이 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귀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김 금 래**

공청회 세부일정

사회 : 김 지 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소장)

시 간	주 요 일 정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 : 김금래(여성가족부 장관)
14:10 ~ 14:40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발제
14:40 ~ 14:50	휴식
14:50 ~ 16:30	지정토론 좌장 임 영 식 청소년학과교수협의회장(중앙대교수) 토론 길 은 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박 철 웅 백석대학교 교수 송 민 경 경기대학교 교수 이 승 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 지 세 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 부장
16:30 ~ 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2013~2017)

I. 청소년정책 환경	7
II.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평가	15
III.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개요	21
IV. 정책 과제(안)	27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토론문

●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77
● 박철웅(백석대학교 청소년전공 교수)	81
● 송민경(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84
● 이승렬(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	88
● 지세선(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장)	9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2013~2017)

추진배경 및 계획

◆ 추진배경

-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12년 완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13~'17) 수립 추진
 - ※ 「청소년기본법」 상 매 5년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의무적 수립
 - '제1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93.9월 수립한 이래 현재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을 수립('10.12월)하여 추진 중
-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 필요

◆ 추진경과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11.8~12월)
- 전문가 T/F 및 분야별 자문단 구성·운영('12.2월~)
- 청소년 학계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12.4.5)
- 시설·단체 등 지역현장 의견수렴('12.4~10월)
-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장 대상 정책간담회 개최('12.5.2)
- 8개 시·도 지역토론회 개최('12.7~10월)
 - *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 관계부처·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의('12.8~10월)

◆ 향후계획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개최('12.11월)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확정·발표('12.12월)

I. 청소년정책 환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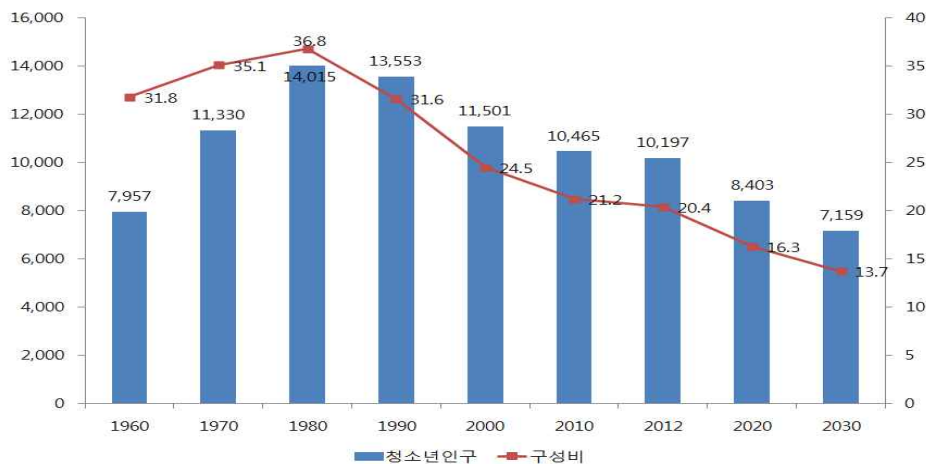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

□ 청소년 인구의 감소

-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80) 36.8% → ('12) 20.4% → ('30) 13.7% 예상

〈연도별 청소년인구 비율의 변화〉



□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

- 가족규모가 감소하고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 구조 다양화

※ 이혼가구 ('90) 17만가구 → ('10) 127만가구

※ 조손가정 ('00) 4만5천225가구 → ('05) 5만8천101가구 → ('10) 6만9천175가구

※ 미혼모 대비 양육모 비율 ('98) 7.2% → ('01) 11.0% → ('09) 29.5%

-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감소 등으로 가정의 자녀 양육 및 보호 기능 약화 지속

※ 부모-자녀의 지지적 관계 지수는 한국이 2.84로 미국(3.41), 일본(2.87), 독일(3.24), 스웨덴(2.98)에 비해 낮은 수준

□ 청소년 생활환경의 변화

- 지나친 학업경쟁으로 인한 청소년의 불균형한 생활패턴
 - 한국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가입국들 중 최고 수준이며, 여가나 수면시간 부족으로 불균형적인 발달과 행복감 저하 우려
- 주 5일 수업제 부분도입('05) 이후 청소년의 여가 시간 오히려 감소
 - ※ 청소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04) 4시간 33분 → ('09) 4시간 5분
- 청소년유해매체 증가 및 학교폭력 현상 심화
 -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유해 간행물, 영상물 등의 건수 ('97) 5,104건 → ('11) 5,361건
 - ※ 학교폭력 피해율 ('09) 9.4% → ('10) 11.8% → ('11) 18.3%
- 초·중·고 등 청소년 전반에 걸쳐 인터넷과 게임의존 성향 증가
 - ※ 청소년(만10~19세) 인터넷중독 10.4%(잠재적위험7.5%, 고위험2.9%) 성인(6.8%) 1.6배

< 청소년 및 학교급별 인터넷 중독률 현황 (2011) >

(단위 : %)

구 분	청소년 (10 ~ 19세)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인터넷 중독률	10.4	10.0	8.6	12.4	11.0
잠재적위험	7.5	7.9	6.5	8.3	9.0
고 위 험	2.9	2.1	2.1	4.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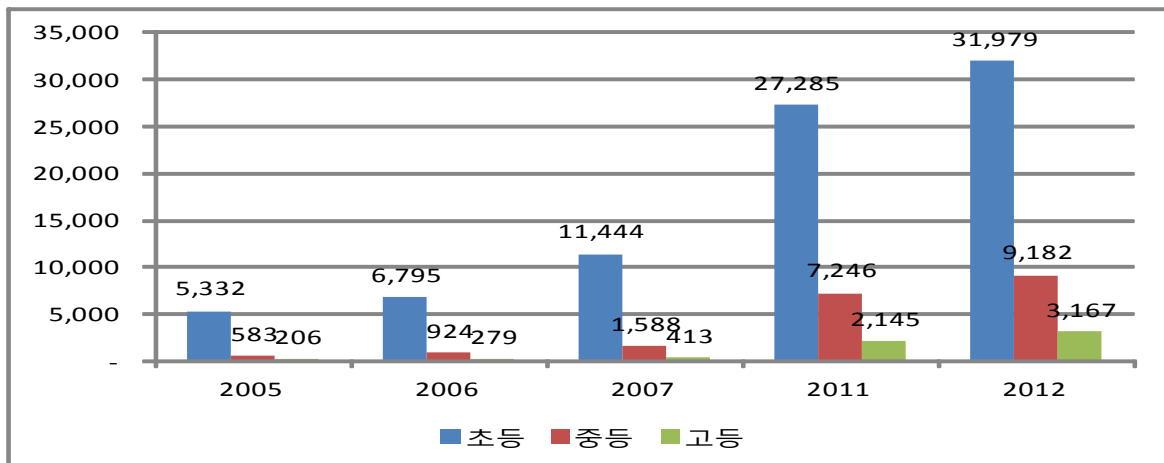
□ 사회적 양극화 심화

- 소득 양극화로 인한 중간층 감소 및 빈곤가구의 증가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 ※ 상대빈곤('89)8.6%→('99)12.4%→('10)14.9% / 지니계수('89)0.284→('99)0.294→('10)0.315
- 빈곤층 증가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증가 우려

□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속

-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증가 등 다문화사회 가속화
 - ※ 국제결혼 총 건수 ('03) 24,776건 → ('11) 29,762건
 - ※ 한국의 외국인 거주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 ('05)53만명→('11)126만명
- 다문화 구성원이 소외됨으로 인해 취약위기집단화 가능성
 -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 ('05) 6,121명 → ('12) 44,328명 증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수(단위: 명)〉



□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률 증가
 - ※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률은 ('07)68.2%→('10)88.8%로 증가
 - ※ '11년 6월 기준 국내 청소년(만19세미만)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168만여명, 국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11.5%에 해당
- SNS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 증진 및 정치·사회참여 확대
 - ※ '11년 중동의 민주화운동,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등에서 SNS의 파급력과 영향력 대두

□ 기타 사회·경제적 환경

-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 및 고용 불안정성 증대로 입직 지연 심화
 - ※ 대기업 입직('98)남26세, 여23.5세→('09)남28.7세, 여25.6세, 각각 2.7세와 2.1세 증가
- 경제적 자립 시기의 지연, 개인주의적 가치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결혼·출산 지연 및 기피 현상 심화 뚜렷
 - ※ 초혼 ('01)남 29.5세 여 26.8세 → ('06)남 31.0세 여 27.8세 → ('11)남 31.9세, 여 29.1세
 - ※ 모의 첫 자녀 출산 연령 ('01)28.0세 → ('06)29.3세 → ('11)30.2세

2

청소년들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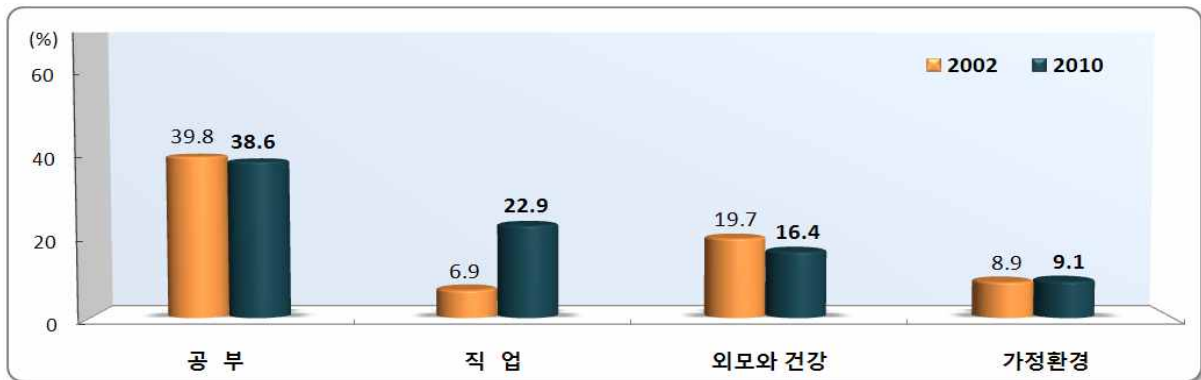
□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나 직업(취업)

○ '10년 청소년(15~24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8.6%)와 직업(22.9%)

※ '02년의 경우 공부(39.8%), 외모와 건강(19.7%)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

※ 20~24세의 경우 직업에 대한 고민 ('02) 8.6% → ('10) 38.5%로 크게 증가

<15~24세 청소년의 고민거리>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 국제적으로 볼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으며 국내적으로도 주관적인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

※ '11년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5.98점으로 2009년 64.3점, 2010년 65.1점에 이어 3년 연속 OECD국가 중 최하위

※ '11년 발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한국 청소년(15-29세) “매우행복하다”는 응답비율 9.4%에 불과(프랑스 45.9%, 영국 45.3%, 스웨덴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일본 30.1%, 독일 26.7%)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

○ 지식기반사회 진전, 글로벌경쟁 보편화,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 강화 중요

-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간의 균형 있는 성장이 요구되며 특히 사회적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 우리 청소년의 '지적 역량'은 OECD 36개국 중 2위,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협력도를 보여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5위에 불과

□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

○ 청소년들의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약화

- ※ 청소년(10~24세)의 평일 24시간 중 운동시간 ('99)14분 36초 → ('09)12분 4초로 감소
- ※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을 ('06) 11.6% → ('10) 14.3% 증가, 특히 고도비만 학생의 비중도 1.3%로 '06년에 비해 0.5%p 증가하여 지속적인 비만예방 관리 필요

<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

(단위 : %)

	비만율 ¹⁾	경 도	중등도	고 도
2006	11.6	6.5	4.3	0.8
2007	11.6	6.3	4.4	0.8
2008	11.2	6.2	4.2	0.8
2009	13.2	6.9	5.2	1.1
2010	14.3	7.4	5.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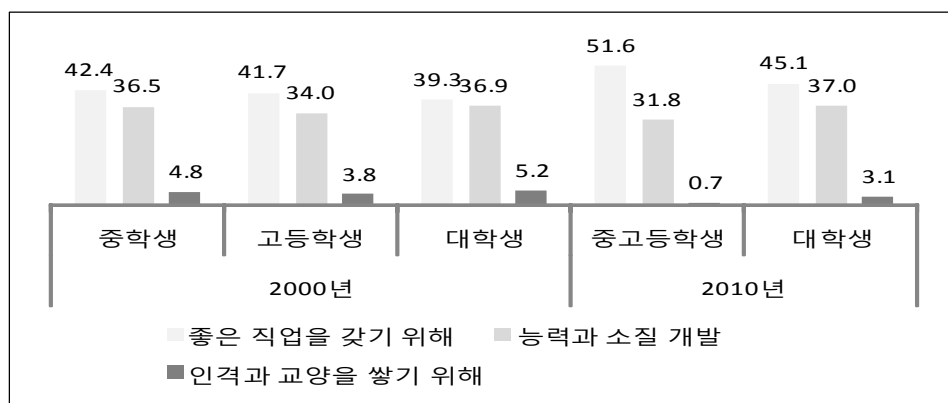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 수준 심각

- ※ 청소년 우울감 경험율 ('05)29.9% → ('10) 37.4%
- ※ 청소년(15~24세) 스트레스 인지율 ('08) 56.5% → ('10) 69.6%
- ※ '10년 청소년(15~24세)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이 13%로 가장 많고 운수사고 순

□ 청소년들의 가치관

○ 청소년들은 교육을 단순히 취업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 뚜렷

<청소년들의 기대 교육 목적(2000/2010)>



- 직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취업이 불확실해지고 청년 노동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부정적으로 변화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0대 이하와 20대의 경우 전체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혼에 대한 견해는 전체 결과보다 개방적

Ⅱ.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평가

□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 청소년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추진

※ 44개 청소년수련시설과 100개 학교 참여

○ 체험활동 형태의 다양화 등 활성화 유도를 위한 여건조성

※ 자원봉사 터전('07년 3,657개→'11년 8,620개), 청소년동아리 지원('07년 975개→'11년 2,000개), 청소년문화존 지원('07년 41개→'11년 126개) 확대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및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확충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제안의 높은 반영률과 지역 참여위원회, 시설·단체별 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확대

※ 정책 반영률 : ('05년) 85.7% → ('07년) 88.9% → ('10년) 92.4%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현황>

(단위: 개)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참여위원회	162	174	174	174	186
운영위원회	258	273	286	286	305

○ '12년 UN '공공행정상(PSA: Public Service Awards)' 정책 결정참여 부문 수상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통합지원 체계(CYS-Net) 구축의 법적근거 마련 및 운영 확대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12.2월 개정 '12.8월 시행)

<CYS-Net 구축 및 Help Call 1388 이용 현황>

(단위: 개소, 건)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CYS-Net 구축	68	81	97	166	186
Help Call 이용	243,060	353,578	424,742	422,643	432,616
모바일문자 상담	29,985	93,565	146,676	161,023	195,466

○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및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 강화

- ※ 청소년 방과후활동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1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확대('08년 185개소 → '12년 200개소)
- ※ 가출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 ※ 학업중단 청소년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두드림) 확대('08년 15개소 → '12년 49개소)

□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치료 지원 강화

- '인터넷게임전전이용제' 도입 법적 근거 마련 및 만 16세미만 청소년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시행
 - ※ 청소년보호법 개정('11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지원 서비스 강화(전국 186개소)
- 인터넷중독 치료재활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및 치료협력병원 연계 체계 구축,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건립('12년)

□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정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10년) 및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개편을 통한 기능 확대
 -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12년)
- 지역단위에서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기능 수행을 통한 청소년정책 지원 체계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한계는 새롭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연계하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반영 추진

- 청소년의 경제활동 및 결혼 연령 지연 등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연계망 미흡
 -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 및 고용 불안정성 증대로 입직 지연 심화
 - ※ 입직 연령 지연 ('98)남26세, 여23.5세 → ('09)남28.7세, 여25.6세
 - 경제적 자립 시기의 지연, 개인주의적 가치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결혼·출산 지연 및 기피 현상 심화 뚜렷
 - ※ 초혼 연령 지연 ('01) 남29.5세, 여26.8세 → ('11) 남31.9세, 여29.1세
 -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원 인프라 여전히 부족
 - ※ 20~24세 직업에 대한 고민 크게 증가 ('02) 8.6% → ('10) 38.5%
 - ※ 직업교육(훈련) 유경험 청소년 감소 ('04) 청년층 인구의 19.5%→('10) 15.3%
 - 성인기 이행 지연에 따른 고용·주거 등 청소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지원 필요성 대두
- 글로벌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간의 불균형 뚜렷
 -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수준은 여전히 최하위권
 - ※ 우리 청소년의 '지적 역량'은 OECD 36개국 중 2위,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협력도를 보여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5위에 불과
 - 주 5일 수업제 시행 후 다양한 체험활동과 여가생활 증가보다 학원가 주말반 전문수업, 불법 기숙학원 등장 등 부작용 우려
 - ※ 학교 토요프로그램 참여 : 전체 학생의 21.1% 수준에 불과('12.3월)

□ 취업 문제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부상함에 따라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취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은 커져가고 있으나 수련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은 부족한 수준

- ※ 12년 5월 현재 신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48건 중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4건으로 8.3% 수준('11년 신규 242건 중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36건으로 14.9%)

- ※ '11년 기준 지난 1년 간 직업체험 참여율은 41.1%로 매우 낮은 수준

□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학교폭력
및 성범죄 등 발생

- 청소년유해매체 증가 및 학교폭력 현상 심화

-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건수 증가 ('97) 5,104건 → ('11) 5,361건

- ※ 학교폭력 피해율 증가 ('09) 9.4% → ('10) 11.8% → ('11) 18.3%

-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성범죄 발생 및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층의 두려움은 여전히 높은 상태

- ※ 성범죄 발생건수 증가 ('07) 15,325건 → ('10) 20,364건

- ※ 20대 이하 성희롱·성폭력 두려움 43.9%(전체 연령층 평균 32.2%)

□ 스마트폰 등 신종매체의 청소년 유해성 차단 방안 필요

- 스마트폰 및 SNS 등 신종매체가 등장하고 청소년의 이용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 지속

- ※ '11년 포털사이트 자살·가출카페 모니터링(자살, 가출정보 610건 삭제 완료, 포털사이트), 불법 프리서버 온라인게임사이트 점검(불법프리서버 온라인게임사이트 373건 차단요청, 게임물등급위) 등 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 차단

- 기존 법·제도로 규제가 어려운 신종매체의 청소년 유해성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필요

Ⅲ.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개요

□ [기본성격] 선제적 청소년정책

-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의 국가정책 우선순위 부여
- ⇒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 차원의 연계·발전과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정책대상] 포괄적 청소년정책

- 문제 중심의 청소년정책이 아닌, 다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의 요구와 참여에 기초한 정책 수립
- ⇒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9세~24세)을 모두 포괄하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추진

□ [정책내용] 균형적 청소년정책

-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 활동·복지·자립·보호 등 정책 영역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
- ⇒ 청소년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정책서비스 지원

□ [정책효과] 실질적 청소년정책

- 실질적으로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을 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 ⇒ 정책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책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강화

2

비전 및 목표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목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정책 과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신규20, 보완55)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 · 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 · 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 · 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3

수립 개요

□ 제5차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지향

○ 제4차 기본계획의 연계 선상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기초하여 범부처 차원의 국가정책 기본계획으로서 청소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

구분	제4차 기본계획	제5차 기본계획
과제 구성	4대 영역 12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과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
기본 방향	● 통합적 청소년정책 - 가족·여성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범부처·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 보편적 청소년정책 - 성·인종·문화·국적·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망 구축 ● 수요자 중심 청소년정책 -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추진	● 제4차 기본계획 연속성 담보 - 가족·여성정책과 연계한 발전전략 지향 ● 선제적·실질적 청소년정책 - 미래사회 선제적 대응 및 범부처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을 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 ● 포괄적·균형적 청소년정책 - 모든 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 청소년의 성장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위한 균형적 지원

□ 향후 5년간 27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소년의 역량, 참여, 균형, 안전을 목표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추진

-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여건 조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권리 증진 중점 추진
-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의 맞춤형 복지와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IV. 정책 과제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 급증,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미래세대 역량 강화 중요성 증대
 - * 노인 1명당 부양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50년 1.4명으로 15~64세 인구 1명이 65세 노인인구 부양 예상('10년 6.7명, '20년 4.6명, '30년 2.7명)
- 다양한 역량 증진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에 필수적인 핵심역량에 대한 지원 필요성 부각
 - * OECD DeSeCo 프로젝트(1997~2003)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 규명 - 영국, 벨기에, 뉴질랜드 등 선진국 중심으로 역량중심 학습체계 전환 중
- 인성교육과 체험활동 증진을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건전한 성장활동 여건조성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활동 인프라 확충 요구
 - * 청소년 기부단체 참여활동(ICCIS, 2009): 조사 대상 36개 국가 평균 15세 청소년 29% 참여, 한국은 8%로 매우 낮은 수준
 - *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전국 3,477개)별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11년 현재 215개소로 설치율은 6.2% 수준

정책방향

▶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 *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및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 * 모든 청소년들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보편적 국제교류 사업 추진, 남북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

▶ 청소년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 강화 및 읍·면·동 수준 청소년 체험 시설 확대

▶ 인성·배려·나눔 함양을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 기부활동 및 인성교육 강화 지원

- *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인성교육 함양 프로그램 확대, 민주시민교육 강화

①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 미래 지식기반사회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역량별 지표 개발 및 측정,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 국가 청소년역량지수(Youth Competencies Index) 법적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 영역별 역량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②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가칭)」로 개편하고 종합지원 기능 강화 및 설치 확대 추진 (여성가족부)
 -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 종합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향후 5개년간 시·군·구별 최소 4개소 이상 확대 설치
-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권역(지역)별 특성화(전문화)된 국립 청소년시설 확충 (여성가족부)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및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건립·운영(임대형 민자사업, '13년 완공)
 - 생태체험, 청소년교류 등 특성화(전문화)된 국립시설 확충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이용률 제고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수련시설 안전점검·종합평가 주기 강화(3년 → 매년) 및 종합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미 참여시설 처분 조항 포함) (여성가족부)

- 주 5일 수업제,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특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③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추진 (여성가족부)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학교 배치 시범운영 (여성가족부, 교과부)
- 학교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및 체계적 운영 강화 (교과부)
- 초·중·고교 학생의 주말 및 방학기간 등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 ※ 영국 국가시민봉사 추진, 아일랜드 전환학년제(1년 동안 체험활동)
-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 부처)

④ 청소년 희망카드(Youth Opportunity Card) 도입

- 각종 할인제 및 청소년증 등을 통합한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 (여성가족부)
 - 봉사활동, 지역사회참여, 사회기부 등 긍정적인 사회기여 활동 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해외 사례

▶ 영국의 기회카드(Opportunity Card)

- 지방정부에서 기회카드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 13~16세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기회카드에 돈을 충전해 주며 청소년들이 비행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이를 어길 시에는 카드 정지 또는 회수)

▶ 스코틀랜드의 영 스코트 카드(Young Scot Card)

- Young Scot Card는 모든 스코틀랜드 지역의회와 공동으로 만든 카드로서 연령 증명, 현금이 필요 없는 학교급식, 레저/도서관 시설이용, 교통할인,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1,800개 종류의 할인이 이루어지고, 약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카드를 활용

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인 청소년문화존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추진 (문화부)
-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실시에 따라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확대 (문화부)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토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소외지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예술꽃씨앗학교' 확대 (문화부)
 - 농산어촌 등 소외·취약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로 지원 대상 확대
- 문화예술동아리 및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사업 확대 운영 (문화부)
 - 학생 눈높이에 맞는 우수 교안 개발·보급
 - 초·중·고교와 아동복지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및 교정·소년원 등 시설 및 단체에 전문 예술 강사 파견 확대

⑥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학교의 학생봉사활동 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여성가족부, 교과부, 행안부)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 제도 도입 추진 (여성가족부)
- 또래 멘토와 취약청소년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 가족단위 자원봉사 등 특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확대 운영 (여성가족부)
- 정기·장기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검색기능 강화, 온라인 교육 등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개선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기부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부)
 - 아동·청소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교육 교재 개발, 기부교육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운영

⑦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성화 추진 (여성가족부)
 - 인증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청소년 참여 확대, 인증수련활동 홍보 강화
 - 인증 수련활동에 대한 대학 입학 전형(입학사정관) 및 공공기관(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및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의 확대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여성가족부)
- 문화·예술, 봉사, 과학, 스포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운영토록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①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추진 (여성가족부, 문화부)
-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수련시설 등에 보급·운영
-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 (여성가족부)
- 국가 간 교류, 지자체 교류, 기관 및 단체 국제 교류 시 이주배경 청소년 인력을 활용하여 외부 인사 영접 및 통역 등의 역할 수행
-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풀 관리 운영 모델 개발

③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들의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테마형 해외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국제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중·일 청소년간 교류 강화 등 추진 (여성가족부, 외통부)
- 해외 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 해외 한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아동·청소년업무 지원 협약, 해외 한인 아동·청소년과 한국 아동·청소년과의 교류 활성화, 해외 한인 아동·청소년에게 모국문화 및 모국어 지원 사업 추진

④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여성가족부)
 - 국제교류 인원, 지원범위 확대 등으로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보편적 국제교류 사업 추진
 - 청소년국제교류 전문가 양성 및 연령별·수준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교류센터」의 조직 및 기능 확대를 통한 청소년국제교류의 종합적 기능 수행
 - 청소년 국제교류 사후관리 강화 및 성과활용 시스템 구축
- 저개발 국가 청소년들을 위한 개발협력(ODA) 확대 (여성가족부, 외통부)
 - IT 및 한국어 교육, 환경 및 보건위생 교육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 확대 추진

⑤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강화

- 남북한 청소년 대표단 상호 교환 방문, 남북한 청소년분야 대표자 회의 정례화 (통일부)
-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및 상호이해 증진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통일부)
 - 남북공동 청소년 현황조사(가치관, 언어생활, 미디어, 여가, 문화, 활동실태 등) 및 「북한 바로 알기」 교육 실시 등

①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 체계 강화

-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행안부)
- 자녀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연수 강화 (교과부)
-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성교육 기능 강화 및 언어·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광고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 추진 (여성가족부, 방통위)
-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교과부)
 - 학생자치활동활성화를 통한 학교문화 선진화 지속적 추진
 - 효과적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개발 및 프로그램 확산 추진
 -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선정 운영
- 분노조절, 정직, 배려, 자기조절, 사회적 책무 등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품성계발 프로그램 운영 강화 (교과부)
 - 품성계발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및 관련 기관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확산
-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 부모 및 청소년대상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발달이해, 자녀와의 대화법, 인성교육법 등 교육
- 인성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여성가족부, 교과부, 문화부, 방통위)

②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학교교육을 통해 올바른 언어습관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실화 (교과부)
- 창의적체험활동 및 국어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언어습관 순화 및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한글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과부)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학교 내 지도, 가정 내 지도 등), 청소년 언어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행사 개최(공모전, 글짓기 대회 등) (문화부)

③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 (여성가족부)
-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교과부)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개설을 통한 시민역량강화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사회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습관 형성, 기본생활규칙 및 생활법률 이해를 비롯한 민주시민 역량을 준비하는 학습의 장 마련

④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 및 동아리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교과부)
 - 학생들의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 고취
 - ※ 또래상담운영학교 : ('12) 3,320개교 → ('13) 4,000개교 → ('15) 희망하는 모든학교
- 초·중등 교사 대상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지속 확대 (여성가족부, 교과부)

- 전국 또래상담 연합회 운영 및 활성화 대회 개최 (여성가족부, 교과부)
 - 지역별 또래상담 모임을 총괄하는 전국 또래상담자 연합회 운영
 - 매년 정기적인 활성화 대회를 통해 지역별 또래상담 운영 방식 공유, 청소년 자조 문화 확산
-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교과부)
 - 또래상담자 양성 기본프로그램 외에 특정 문제 영역에 따른 개입 방안을 적용한 심화프로그램 개발·보급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운영 등 청소년의 활발한 참여활동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모든 부문에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등에서의 참여활동 활성화와 지속적인 권리보호 증진 필요성 증대
 -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ICCIS, 2009) : 한국 청소년단체 참여율 4%(36개국 평균 10%), 환경운동단체 5%(평균 29%), 인권운동단체 2%(평균 16%)
 - * 청소년 학교 참여활동(ICCIS, 2009): 토론 참여 33%(36개국 평균 44%), 학교운영의사결정 참여 33%(평균 40%) 등 참여국(38개국) 평균수준 보다 낮음
- 규칙적 운동 부족 등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약화를 야기하는 환경개선과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지원 강화 필요
 - * 최근 일주일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 미국 18.1%, 일본 14.3%, 중국 10.8%인데 비해 한국 30.5%로 두 배 높게 나타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청소년건강실태조사)
 - * 10대 자살에 대한 충동은 '08년(8.9%)보다 '10년 10.1%로 높아졌으며 전체 연령 평균(7.7%)보다 2.4%p나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0, 사회조사)
 - * '10년 20~24세 청소년 자살에 따른 사망률(10만 명당)은 '09년 20.3건에서 '10년 45.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통계청, 2010, 사회조사)

정책방향

▶ 청소년 정책결정과정 참여 활성화 및 매체 다양화

- * 청소년정책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참여 유도

▶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청소년정책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예산 참여 제도 등 시행

▶ 청소년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강화 지원

-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체력 활동 강화 및 연계 협력을 통해 건강 강화 지원

▶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청소년 권리 보호 강화

- *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리 교육 강화

①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의견 및 청원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사이트(가칭 @청소년의 목소리)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여성가족부)
- 모든 일반청소년 대상 트위터, SNS(Social Network Service), 스마트폰 활용 등을 통한 정책참여 통로 마련 (여성가족부)
- 지역사회 청소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추진 (여성가족부)
 - 시·군·구 청소년시설에 기설치된 화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지역의 학교자치활동 동아리가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②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 청소년 정책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 증진 도모 (여성가족부)

③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활성화 추진 (여성가족부)
- 청소년운영위원회 확대 및 운영제안 반영 모니터링 지속적 실시 (여성가족부)
-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시·도 연합워크숍 및 대토론회 정례화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추진 (여성가족부)

- 학교·학생 자치활동과 참여기구의 연계 강화 및 학교 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여성가족부, 교과부)
- ‘대한민국아동총회’ 결과 채택된 의제의 정책 반영률과 시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제고 (복지부)
-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단 국제회의 개최 (여성가족부)

4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 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청소년 예산 참여제도)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여성가족부)

※ 외국의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례

- ▶ 핀란드 헬싱키의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
 - 매년 3월, 수도 헬싱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 초·중고 학생대표,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사대표, 기자들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각 학급별 및 학교별로 개최되는 워크숍을 통해 미리 선정된 지역적 의제들을 시장과 함께 토론하고, 실현 가능한 의제를 택해 예산까지 확정
- ▶ 필리핀 청소년의회(Sangguniang Kabataan)
 - 청소년(15-19세)들이 지역에서 의회 대표자들을 직접 선출하며,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 사회 발전과 청소년문제 해결에 직접 관여하며 지자체 예산의 10%는 지역 청소년 문제해결과 교육 등에 배분
- ▶ 브라질 바라만사시의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
 - 1998년 9-15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children's participatory budget council: CPBC)를 시작, 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 부여, 이밖에 회계 영수증 콘테스트(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소비자의 권리와 시 예산에서 세금징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간접세의 의미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공공예산교육안도입(공공재정에 관한 내용을 초등학교 학습계획에 포함시키는 프로그램) 등 추진

① 청소년 체력 강화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보급 (여성가족부)
- 청소년 체력 증진 기반 조성 (문화부)
 - 청소년 체력 측정 요인 및 기준 개발(국미체력인증제 세분화)
 - 청소년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 및 동영상 개발 보급
- 청소년 스포츠 활동 여건 개선 (문화부)
 - 방과 후, 주말 이용 학교 밖 청소년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등
- '토요 스포츠데이'(토요 스포츠 강사 배치) 운영 확대 (문화부, 교과부)
- 체육수업시수 확대, 체육교사 및 스포츠 강사 증원 추진 (문화부, 교과부)
-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및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운영 확대 (교과부)
- 천식·아토피 예방관리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및 예방관리수칙 제정·보급 등 청소년 질병 예방 및 예방접종 체계 개선 (복지부, 환경부)

②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

- 심야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지도·감독 등 관리 강화 (교과부)
- 청소년기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 설정, 영양 구성 및 열량 표시 의무 강화, 영양 교육의 내실화 추진 (복지부, 식약청)
-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지침 보급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생활 습관병(아동비만, 아토피 등)을 극복하고 청소년의 바른 먹거리 문화 정착 추진 (농식품부)
-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약청)

③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 학교 및 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여성가족부)
- 치료의 장기화로 학교수업 중단과 학교복귀 시 학업공백 및 학교 부적응 최소화를 위해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정신건강 병원학교 운영 확대 (복지부)
- 청소년 쉼터, 청소년 일시보호시설에서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치료 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건강증진학교 확대 운영 및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교과부)

④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교과부)
 - 개별 청소년의 정신건강 검사 정기적 실시
 - 검사 결과를 위기도에 따라 분류·관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정신건강 위기도에 따른 개입 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교과부, 복지부)
 -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도에 따라 차별화된 적절 프로그램 개발
 - 개별 상황이나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제공
 - 정신건강 위기도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성 검정을 위한 시범 사업 실시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연결망 구축 (복지부)
 - 지역사회 내 민·관 정신건강 서비스 자원에 대한 파악 및 분석 실시
 -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설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 전문기관과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정신과 의사 및 임상심리사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을 연계한 청소년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

①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

-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활성화 및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강화 (여성가족부)
- 권리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권리교육 강사 인력풀 구성·운영 등 청소년 권리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관하여 각 부처별 이행 여부 점검 (각 부처)

②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 건전한 아르바이트 여건 조성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조기 정착 (고용부)
- 청소년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부)
 - 방학기간 또는 학기중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하여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집중 점검
 - 청소년리더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청소년 근로조건 홍보
-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 지역(광역시→시·도) 및 실시시기(방학기간→연중), 보호대상(15~18세 연소근로자→청소년) 확대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촉진 (여성가족부, 고용부)
- 청소년 권리구제 활동 강화 (고용부)
 - 임금체불 등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체계 운영
 - 학교,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민간단체·협회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사업주 등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교육·홍보 실시

○ 청소년 행복일터 캠페인 전개 (고용부)

-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교육, 가두캠페인 등 전개

③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 범정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중장기 대책 수립·추진 (여성가족부, 문화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시 기준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여성가족부, 문화부)
- 청소년 연예인 방송활동 및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운영 (문화부, 방통위)
- 대상별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등 민간자율정화 지원 (여성가족부, 문화부, 방통위)

④ 미디어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 보호 강화

- 청소년의 미디어콘텐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주체로서의 청소년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 청소년이 주로 접하는 미디어(게임, 영화, 음반, 만화 등 각종 IT 관련 신기술 아이템 등)에 대해 청소년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한 교육 지원

⑤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조성

-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제 확대 추진,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교과부, 문화부)
- 선수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소득양극화로 인한 중간층 감소 및 빈곤층 증가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확대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수요 급증
 - * 빈곤청소년 109만명(통계청, 2009) / 요보호아동 ('07) 8,861명 → ('10) 17,119명(보건복지부, 2010)
 - * 복지지원 대상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그물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필요
- 다문화가족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과 일반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강화 요구
 - * '12년 6월 현재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4%가 학교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학령기 아동 4,461명, 재학생은 4,288명)되는 등 복지 지원 시급
- 후기청소년(청년) 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 청년실업률 7.7%(전체실업률: 3.4%) / 청년체감실업률 20%이상 (현대경제연구원, 2011)
 - * 일도 교육도 훈련도 안 받는 청소년(NEET) 100만 명(한국노동연구원, 2012)

정책방향

- ▣ 소득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 모든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성인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상별·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확대·강화 및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 * 학교폭력, 가출, 보호관찰, 인터넷중독,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확대·강화하고 조기발굴을 통한 선제적 대응 강화
- ▣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활성화
 - *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진로체험 기회 확대 추진
- ▣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 지원 및 주거 지원 강화
 - *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하여 공공부문 및 대기업 취업 확대, 창업 지원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

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 * 다문화 이해 교육, 가족교육, 부모자녀 교육 등
-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해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 이해 프로그램 지원 및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한 이중언어(bilingual)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교과부)
 - * (교육부) 이중언어강사(유·초·중·고) 양성 확대, (여가부) 이중언어강사는 단계적으로 교육부의 이중언어교육으로 통합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지원서비스’ 확대 - 초등학생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지도 등 학교생활적응 지원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확대 (교과부)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에 일정 비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가족부)

②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지원체계 확립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방안 마련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연계 강화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 다문화가정 학생 제도교육 진입지원 강화 (교과부, 법무부)

-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적 취득 시 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협력하여 입학 절차를 안내하고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조기 진입 지원
 - * 시·도 교육청의 전담코디네이터가 출입국관리소와 연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진입을 적극 지원
- 단위 학교에서의 입학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여성가족부, 교과부)
 - 대학생, 방문지도사를 통한 1:1 연계, 기초학습·상담 멘토링 서비스 지원
 - 정규학교 입학 전 학교생활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 및 레인보우스쿨 운영
- 비진학 및 탈학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여성가족부)
 - 진학 및 취업 지원 강화 등 '레인보우스쿨' 기능 확대 및 재편
 - 레인보우스쿨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학교 편입·진로지도 등 지속적 사후관리·지원 강화
 - 비진학 및 탈학교 아동·청소년(10대 후반~20대 초반) 소양교육(성교육, 경제교육, 시민교육 등) 및 진로지도
- 이주배경 청소년의 불법근로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고용부)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대상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인력 양성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한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 이주배경 청소년 입영연령 도달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국방부)
 - 군대 내 차별금지 및 군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 신설,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 북한이탈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진로·자립 등 지원 강화 (통일부)

③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자립비용 지원(디딤씨앗통장) 확대, 교육비 지원 강화,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사업 확대 등 (교과부, 복지부, 문화부)
- ※ 디딤씨앗통장(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 저소득 아동과 국가가 1:1 매칭으로 저축하여 저소득 요보호아동의 18세 이후 초기 자립비용 마련
-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진로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 운영, 특수교육기관 확대 (교과부, 고용부)
-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및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 청소년 가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복지부)
- 농어촌 출신의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산어촌 청소년 사회적 자립 및 활동지원 강화 (농식품부)

④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및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청소년 한부모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위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⑤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강화

- 자립지원 대상을 시설아동에서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까지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준비단계 지원, 사례관리, 자원연계 체계 마련 (복지부)
- 보호기간 동안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복지부)
 - 보호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의 발달단계와 수요에 맞는 자립준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자립의지 강화 자립기술 향상
 - 보호종료 전 원가족 유대강화프로그램, 자립준비캠프, 자립체험관 프로그램(1~3단계) 참여 등 보호아동의 실질적 자립 성공 지원
- 보호종료 후 사례관리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복지부)
 - 보호종료 후 일정기간(5년) 지역자원을 연계한 주거·취업·진학지원
 - 자립이후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정서적지지 제공하고 성공적 자립 지원
-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 및 퇴소 후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립준비 아동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스마트폰 앱 개발 등) (복지부)

⑥ 정서적·행동적 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및 전국 확대 (여성가족부)
 - 청소년 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서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
 - 지역사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한 신청창구 마련으로 대상자의 접근성 제고
 - 전국 16개 시·도별 설치 운영 추진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운영의 전문성 확보 (여성가족부)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제공되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실시
 - 전문가 자문 및 평가 등을 통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7]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

- 방과 후 지원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 지역적 편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보편적 이용 가능하도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시설 확대(시군구별 4개소 이상)
 - 취약계층 중학생 맞춤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운영
 - 시도별 특별지원(장애, 다문화가정) 등 대상별 특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도별 각 2개소 이상, 지자체 수요고려)
- 「방과후활동지원단」 운영 내실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 방과 후 종합지원 계획 수립, 방과 후 사업 평가 및 컨설팅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운영모형 개발 등
 -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 등 역할·기능 조정 및 공동 수요조사(대상 청소년 수급 협력), 프로그램 공유 등
- 「지역아동센터」 설치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으로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 (복지부)

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 강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면개정(12.8.2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을 전국단위로 확대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CYS-Net 구축 의무부여
- 필수연계기관 및 협력의무 사항 명시
- CYS-Net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

- 필수연계기관 및 지역사회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여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상담 및 학습·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②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청소년전화 1388, 문자상담(#1388), 1388 청소년지원단, 사이버상담 등 위기청소년 연계망의 지속적 확대 구축 (여성가족부)
- 다양한 청소년 상담채널 확보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여성가족부)

- 보호관찰, 인터넷중독,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심층상담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인력의 점증적 확대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을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 상담) 강화 (여성가족부)
 - 거리 구호지원 활동 전담인력 확대 배치, 야간보호기능 강화
 - 거리상담, 긴급구호를 위한 이동식 쉼터 운영 지속 확대
 - ※ '12년 현재 이동형 일시쉼터 7개소 운영중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멘토풀 확대 (여성가족부)

3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의 조기개입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교과부)
 - 학교와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개입 체계 구축
 - ※ 초·중등의 의무교육 단계에서도 장기 무단결석 등 중도 탈락 위험 징후가 발생할 경우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여 심층 상담 의무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 학업중단 청소년 등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직업·주거* 등의 자원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 교육(대안학교, 학습지원 기관, 한국장학재단 등), 직업(직업훈련기관, 인턴십 제공기관, 아르바이트 정보 등), 주거(임대주택 정보, 자립생활관, 쉼터 등)
 -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력관리를 실시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방치된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실시
- 학업중단 및 가출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여성가족부)

- 학업중단 및 가출 청소년 생활실태와 정책 욕구 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형별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추진

- ◆(조사대상)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 등 학업중단청소년 3,000여명
- ◆(조사방법) 개별면접, 집단유형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 ◆(주요내용) 초·중등 포함, 가출팜 등 사각지대의 학업중단청소년을 발굴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무동기형, 진학형, 취학형 등 유형별 필요한 정책 도출

○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과부, 고용부)

- 학업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및 복교준비 지원 사업 확대
 - * 청소년 ‘해밀’ 프로그램(‘12년 현재 16개시·도센터에서 운영중)을 통해 기초 학습역량 강화 및 학력취득 지원
- 학원비, 인터넷 강의, 교재비 등 청소년 직접지원 확대
- 고위험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12년 연30명) 확대

< 기숙형 대안캠프 >

- 운영형태 : 숙박형태의 집중형 대안 캠프(9박 10일)
- 서비스 내용
 - 생활태도 개선 : 자기문제 이해, 생활리듬 개선, 규칙이행훈련 등
 - 공동체/대인관계 훈련 : 자치활동, 성취감 훈련, 봉사활동, 자기통제력 훈련 등
 - 목표의식 고취 : 목표설계, 자신감 향상, 실천결의 등
 - 대인관계 훈련 : 사회성 기술, 자기통제력 훈련 등

- Wee스쿨 확대, 기존 초·중등교육법상의 대안학교 및 위탁형 대안 학교 운영 및 지원 확대(학습 지도 교사 파견 등) (교과부)
-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및 노동시장 진입 유도 (고용부)

○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유지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교과부)

○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 지원 실시

- 미혼모자시설에서의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성가족부)
- 미혼모자시설의 대안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등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호 (여성가족부, 교과부)

④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 지역별 쉼터 확대, 쉼터의 환경개선 및 기능정비, 유형별 운영매뉴얼 제작 (여성가족부)
 - 의료특화형, 학업지원형, 취업지원형, 가정형 등 각기 쉼터 특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기능 강화
-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의 주거 및 생계 대책 지원을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신설 (여성가족부)
-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과 가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강화 (여성가족부)
- 가출패م 발굴기능 강화 및 대책마련 (여성가족부, 경찰청)
 -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해 “가출청소년 찾기” 주기적 시행
 - 구호지원 활동 전문인력 지속확대 및 민-관 합동으로 가출패م 집중 발굴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도모 (국토부)
-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의 가출예방 (교과부)

⑤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소년원, 보호관찰소, 검찰, 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적 선도대상자 발굴 및 선도효과 모니터링 실시, 상담 및 직업훈련 실시 등을 통한 소년원 출원 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 (법무부)
-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소년원 출원 청소년을 위한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여성가족부, 법무부)
- 범죄예방위원회와 소년보호위원회의 결연을 통하여 소년원 출원 등 보호관찰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 상담 및 지원 (법무부)

⑥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 확대

- 전국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복지부)
-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복지부)
-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복지부)
 - ※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

⑦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 위기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두드림존 프로그램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
 - ※ (‘12) 50개소 → (‘15) 140개소 → (‘17) 248개소 단계적 확대
 - 학업중단, 가출, 시설퇴소, 빈곤 등 15~24세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기술 습득 등 청소년의 사회적 진출지원
 - 대상별 특성에 따른 단계별 집중관리 프로그램 지원
 - ※ (1단계) 자립 동기 강화교육 → (2단계) 직업체험을 통한 자립기술 습득 → (3단계) 사회진출 촉진 과정 후 사후관리 진행
 - 대상자 발견부터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CYS-Net 체계 속에서 타 서비스와 유기적 연계 지원
 - ※ CYS-Net을 통한 대상자 발견 → 자립지원(두드림존) 및 상담·학업·법률·의료·시설보호지원 연계 → 청소년동반자 등 인적 인프라 적극 연계
- 학업중단·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 맞춤형 훈련(취업사관학교) 확대 (고용부)
 - 학업중단 청소년의 선호직종, 직종별 난이도,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훈련직종 선정
 - 청소년의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및 심리지도·진로지도·취업알선 등 특화·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12년 현재 4개기관, 4개직종(기계가공, 특수용접, 커피바리스타, 피부미용) 127명 훈련실시

- 소년원·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법무부)

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전국 확대 추진 (여성가족부)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지속적 상담·사례관리 실시
- ※ '12년 8개 시·도에서 특별지원사업 시범운영

①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community workplace) 추진

- 지역사회(읍·면·동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다양한 기업의 연계를 통해 직장체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 기회 확대와 공동체 의식 강화 도모 (여성가족부, 교과부, 고용부)
- '직장체험주간' 지정 등 지역 내 학생 대상 지역사회 직장체험 실시

▶ 일본의 중학생 대상 직장체험프로그램(Career Start Week)

- 2004년 「청소년 자립·도전을 위한 액션플랜 강화」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 이상의 직업체험 실시'를 정책방침으로 제시하고 2005년부터 「커리어 스타트 위크(Career Start Week)」 실시, 09년 현재 전국 9,424개교에서 종합적 학습시간(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을 주로 이용해 실시 중

②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 학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급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표준지침 마련 (교과부)
 -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 하여 학교·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지원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확대('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 배치)
 -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을 활용한 진로코치 양성 및 배치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통한 여학생 대상 진로 컨설팅 활성화 추진 (여성가족부)
 - 여대생 대상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성청소년의 커리어개발 역량 강화
 - 지역 여대생을 통한 여중고생 대상 진로탐색 관련 멘토링 지원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우수여성과학기술자와 여학생간 온/오프라인의 WISET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그룹멘토링, 진학멘토링)

③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 청소년 직업체험으로 특화된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 추진 (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여성가족부)
-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 등 (여성가족부, 법무부)
- 교육청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진로상담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교과부, 고용부)

④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 지원

-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 대학·고교를 확대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 지원 강화 (고용부, 교과부)
- 지역 청년에게 지역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중소기업 채용박람회 권역별 개최를 통해 지역 밀착형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부, 중기청)
- 해외로 일자리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구인 수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형 훈련으로 전환, 해외 진출국가 다변화, 인프라 확대 등 추진 (고용부)
- 청소년(청년)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방안 마련 (중기청)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인프라 확대를 통한 청년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청년 창업 교육과정 개설 및 확대 운영 (중기청)
 - 청소년 비즈쿨 및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창조캠퍼스 활성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창조적 직업능력 개발

⑤ 청소년(청년) 주거 지원

- 청소년(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아동복지 퇴소 청소년 등)에게 우선적으로 실시 (국토부)
- 공공임대주택 중 청년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청년 1인 가구 허용 추진 (국토부)
- 대학부지내 기숙사 추가 건립 지원 확대 등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추진 (교과부)

⑥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세대 진로, 가치관, 비전 설정 등을 위해 기성세대와의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고용부, 복지부)
- 청소년 관심분야 멘토풀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 기업의 사회공헌 유치를 위한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

⑦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 기업과 교육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실무현장에서의 과제해결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고용부)
 - 직업 능력 개발 정보망(HRD-Net) 고도화를 통한 일-훈련-자격 연계 정보 제공
 - 훈련이력 조회 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통해 훈련생(구직자)의 효과적인 능력개발 및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관리 지원
 -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분야별 전문가 소개 등을 통해 자율적 학습지원
- 청소년(청년) 친화적 미래유망직업 발굴 및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 교육 등을 통하여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
(교과부, 중기청)

- 미래 유망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 및 결과 제시
- 청소년(청년)들에게 직업세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미래의 직업세계를 접해볼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4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가족기능 약화, 유해환경 확산 등에 따른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여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 증대
 - * 실증·가출청소년(9~19세) : ('07)18,636명 → ('09)22,296명 → ('10)28,124명 → ('11)29,281명
 - *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 : ('09)71,769백명 → ('10)61,910백명 → ('11)76,589백명
-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부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신·변종 유해업소 증가 등 지역사회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추진 필요
 - * '10년 대비 '11년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민원은 중학교 35.6%, 고등학교 19.6% 증가(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 청소년 유해업소 : ('10년) 803,114개소 → ('11년) 810,816개소
 - * 지역사회 위험요소와 관련하여 '10년 10대 청소년은 범죄 발생(57.5%)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응답(통계청 사회조사, 2010)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도입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모바일 및 사이버 유해매체 등 유해환경 노출 증가
 - * 온라인 음란물 접속(여성가족부, 2011): '10년 7.5%에서 '11년 12.3%로 증가
 - * '11년 청소년 중 11.4%가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정책방향

▶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 개별화된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읍·면·동 단위로 커뮤니티 세이프 구축

▶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 생활환경 전반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

- *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폭력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건전한 매체 환경 조성

- *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통합관리 및 인터넷 중독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 체계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매체교육 강화

①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 안전망 구축

- 개별화된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세이프(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및 청소년 활동진흥시설과 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Wee센터 및 Wee클래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등 개별화된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교육·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제공

②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상담영역 조정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가족상담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이혼가정 등 취약가정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가족상담 지원 (여성가족부)
 - 이혼·한부모·재혼가정 청소년 등 상담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한 관련 시설 연계지원 강화
- ‘가족 사랑의 날’ 확산 유도, 공공부문 유연근무제·월례휴가제 활성화, 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전 부처)

-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세대간 이해 증진 도모 (여성가족부, 법무부)
 - 부모교육 아카데미 및 부모 자녀 동반 참여 프로그램 등 개설·운영
- 학교에서의 청소년기 자녀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교과부)
- 가족 공유시간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문화부)

③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여성가족부)
 -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문화생활 여건, 복지수준,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 구획화 등 성장환경의 건전성, 학교폭력 현황,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부모 참여도 등 종합적 요소 반영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 (여성가족부)
 -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

④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

- 신도시 개발 시 청소년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도입 확대,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구역 정비 (여성가족부, 국토부)
- 교육환경평가를 통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차단 (교과부)
 -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입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학교 용지 선정, 교육환경평가기준 재정립을 통한 근본적 교육환경 보호대책 마련

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한 삶 제고를 위하여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 관련 통계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지표 개선 보완 (복지부)
-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사후 조치상황 관리 및 시설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표준모델 개발 (행안부)
-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시설 기능 보장 지원
-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강화 (교과부, 소방방재청)

②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아동·청소년 납치 감시 강화, CCTV설치 확대, 자율방범대원·아동안전보호활동대 활성화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 실종 아동·청소년 찾기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실종 예방 강화 (복지부)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범정부, 지자체, 학교, 경찰 등 관련기관의 협력망 구축 (여성가족부)
- 취약계층 범죄예방 시스템 - 「SOS 국민안심 서비스」 도입 (행안부)
 - 긴급상황시 휴대폰 또는 전용단말기 등으로 경찰에 구조 요청
- 아동·청소년 등하교길 안전 강화 (교과부,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③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 은폐 시 4대 비위 수준에서 엄중 조치 (교과부)
-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교육 등 위기·비행 초기단계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등 비행예방 교육 실시 (법무부)
- 학생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및 법제화 (교과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기능 강화, 전국 Wee 센터 및 CYS-Net을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운영 (여성가족부, 교과부, 경찰청)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을 확대·강화하고,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 피해학생 긴급구조 및 사후지원 (여성가족부)
-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치료재활 의무 지원 (교과부)
 - 학교폭력 발생 즉시 피해학생 심리상담 실시 및 의료·법률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 가해학생에 대해서 심리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해당 학부모도 특별교육 의무 이수
-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 책무성 제고 (교과부)
 -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실시
 - 자녀교육의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고, 아버지교육 확대 추진
-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여성가족부, 교과부)
 -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 추진
 - 가족단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④ 비행 청소년 예방적 · 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 회복적 처우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확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비행 청소년 대상 상담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비행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 봉사 활동 프로그램 확대 (여성가족부)
- 대안교육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등 (법무부)

⑤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

- 청소년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가출, 폭력, 성실태, 생활 등 유해환경 접촉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
-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업소, 신 · 변종 유해업소의 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 고용 행위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강화 (여성가족부, 경찰청)
- 민간 ·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선도 · 보호,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 제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 · 고발활동 강화 (여성가족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 (교과부)
- 청소년 가출·혼숙·음주 등 일탈행위 제도, 청소년 근로권익 점검 · 보호, 가출 등 위기청소년 구호지원 활동 (여성가족부, 경찰청)
- 신 · 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신속 · 적절한 대응으로 신규 유해환경의 확산 방지 (여성가족부, 경찰청)
- 신 · 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⑥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홍보 강화

- 흡연·음주 접촉 저 연령화에 따른 지속적 예방 교육 확산 (여성가족부, 교과부, 복지부)
- 청소년 흡연·음주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교과부, 복지부)
-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호정책 개선 (여성가족부, 교과부, 복지부)

⑦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지원 및 선도·보호 강화

- 위기청소년, 유해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복지부)
- 신분증 위·변조로 연령을 속이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유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 강화 (여성가족부, 교과부, 경찰청)

⑧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취약지역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CCTV 설치 확대, 성범죄 감시단 설립 등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세이프존 구축 및 학교 주변 클린존 구역 확대 등 안전한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행안부, 교과부, 경찰청)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실무협의회와 사례관리팀 활동 강화, 아동 안전지킴이집 확대 및 관리 체계화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강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강화,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실시 등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과부, 국토부)
- 성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및 부모 대상으로 가해유형별·피해유형별 차별화된 치료·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 프로그램 강화 (여성가족부)

①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유해매체(인터넷, 게임, 동영상, 음반 등)에 대한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차단 및 방지를 위한 체계적·통합적 감시·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방통위)
-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보급 확대 (방통위)
- 매체물 등급표시제 기능 강화 (문화부, 방통위)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 대한 상대방 본인인증 의무 강화 (여성가족부)
- 스마트폰 성인물 차단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보급 활성화 (방통위)

②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도'의 안정적 운영 (여성가족부, 문화부)
- 인터넷 중독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지원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교과부, 행안부)
 - 인터넷 중독 해소 및 예방·상담·치료 프로그램 확대
 - 인터넷 문화 개선 홍보 강화
-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적기 상담·치료를 위한 인터넷 중독 전문 인력 배치 확대 (여성가족부, 행안부, 문화부)
 -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중독 해소 전문서비스 효과성 제고
-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생애 주기별 예방 교육 강화 (행안부)

③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 청소년의 유해매체 대응능력 및 건전매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매체 이용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행안부)
 - 건전매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교사연수, 교사(유치원·어린이집 포함) 대상 매체이용지도능력 교육 및 학부모 미디어 교육을 통한 보호자 지도역량 강화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해 미디어 교육 전문가 풀 구축·활용 (행안부, 문화부, 교과부)
-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진단과 예방 대책 수립 및 청소년요금제 효율적 추진 (여성가족부, 방통위, 행안부, 교과부, 복지부, 문화부)
 -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방안 마련과 현황 파악, 예방 교육을 발달단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 및 대국민 홍보
 - 요금상한제 적용 시행
 -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사용금액 문자메시지 통보

현황 및 문제점

-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 필요성 대두
 - * '12년 현재 35개 중앙행정기관(15부 2처 18청) 중 2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37개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중
-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의 보다 긴밀한 연계협력 강화 등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확산 필요
-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환경 전반 처우개선 필요
 - * 청소년지도자의 직무만족 중에서 임금(2.56점), 복지후생(2.69점), 직업의 안정성(2.85점) 등이 평균 점수(3.0점) 이하로 나타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 특히, 청소년지도자 복지개선 중 표준임금체계 마련과 임금 현실화가 가장 필요한 것(46.7%)으로 나타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정책방향

▣ 청소년정책 위상 제고 및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각 부처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 추진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및 지역사회 전달 체계 정비

- *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청소년전담과 설치 등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정비 및 활동분야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처우 개선

- *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 청소년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정책 예산 확충

- * 증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및 일반회계 예산의 연차적 증액, 청소년육성기금 민자 유치 등 청소년 자원 확충 등

① 청소년정책 위상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

- 부처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 추진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하고 위상 강화 (여성가족부)
 - 범부처 정책 추진과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과 성과 평가 등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개편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실무협의회에 민간위원 참여 추진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따른 환류(feed-back) 체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도모 (여성가족부)

②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

- 지역 단위 실무협의기구 신설 및 실무분과 구성·운영 (여성가족부)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지자체와 청소년시설, 교육청, 학교, 의료기관 등 청소년관련 기관·자원을 실무적으로 조정·연계하고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및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추진

- 지방자치단체 내 청소년전담부서 설치 (여성가족부)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청소년전담공무원 확보 (여성가족부)
- 청소년 전담 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①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 주 5일제 수업 전면도입 등 변화된 환경과 관련하여 청소년단체 중심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 중심 활동 기반, 지도인력, 프로그램 등 가용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청소년 단체 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과학적 검증 및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②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보수교육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무표준화,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 (여성가족부)
-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배치기준 강화 및 국비지원 확대(전체 수련시설) 추진 (여성가족부)
-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 개선 추진 (여성가족부)

③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지역사회까지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수준의 전달체계 정비 (여성가족부)
 -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실천 여부 점검 강화
 - 우수 실천 사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중심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 강화 (여성가족부)
 - 시·도 센터 기능 강화 및 시·군·구 단위까지 전달체계 확장
- 청소년 상담복지서비스 정책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전달되어 시행되도록 전달체계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①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 청소년정책 영향 평가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이 청소년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측정하고 정부의 주요정책 중 청소년 연령 차별적 요소에 관한 영향 평가 시범 운영 (여성가족부)
- 지자체에서 공원조성, 하천정비, 시설물 건축 등 주요 시설투자사업 및 축제 등 유·무형 행사 등 모든 사업 추진 시 청소년 영향 및 효과를 고려해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영향평가위원회 및 청소년 영향평가단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지원 (여성가족부)

②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

- 일반회계 예산의 연차적 증액, 청소년육성기금의 민자 유치 및 신규 재원 발굴 등 청소년 재원 확충 (여성가족부)
-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③ 정책 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 내실화 (여성가족부)
 - 국내외 정책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적시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평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환류체계(Feed-back) 구축
 - 지속적인 신규 정책대상자 발굴 및 세분화된 정책서비스 방안 마련
- 청소년 활동·문화 실태 등에 대한 조사통계 신규 생산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정기·비정기)와 비승인국가통계를 아우르는 DB 구축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토론문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금번에 마련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은 청소년을 미래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정책 영역을 활동, 복지, 자립, 보호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실제성과 타당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 환경을 비롯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였고, 정책과제별 주요 담당 기관을 여성가족부만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범부처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포괄적·협력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간에 기본계획에 담아낼 정책과제의 시안 마련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에 따라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가 균형감 있게 구안되어 있다. 따라서 토론문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혹, 누락되었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형태로 작성하였다.

Ⅰ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및 전달체계 기능 강화

○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가칭)」 및 상시적 사무국 설치·운영

과거의 기본계획은 주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었으나, 금번 기본계획은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문화부, 행안부, 복지부, 방통위 등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조와 대응이 필요한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기본계획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 만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전개가 다요인이 혼재되어 복잡하게 나타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현행의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상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명칭이야 어떻게 개칭하든지 관건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청사진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제적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가칭)」의 설치와 관련 업무를 효율적·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사무국 구성이 필요하다. 실무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국장급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실제적으로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사무국은 필요 인력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중앙-지자체간 정책 환류시스템 구성·운영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성과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절대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종 사업 평가차 지자체의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을 만나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청소년정책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지자체의 사업은 주로 전시적·일회적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에 나타난 각종 사업을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보조하여 항시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중앙-지자체간 정책 환류시스템의 일환으로 양 공무원이 참가하는 정기적 정책연찬회 및 정책컨설팅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중앙-지방의 청소년활동지원체계 강화

청소년상담·복지 영역은 중앙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시군구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반면, 청소년활동 영역은 중앙의 청소년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광역시·도까지만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더욱이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자체의 각종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래적 기능 수행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주요 이유로는 영세한 조직 및 예산 규모와 더불어 업무 담당 범위가 광역시·도라는 광범위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조직 및 예산의 영세성은 차치하더라도 청소년활동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시군구 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비가 시급하다. 시군구 단위에 새로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우선 시군구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 중 대표 시설을 지정하여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Ⅰ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청소년활동시설의 재분류를 통한 ‘숙박형 청소년수련관’의 신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1항 2호에 “지자체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의 노력으로 최근 청소년수련관이 양적 팽창 일로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련관의 설치 기준을 벗어나 생활관을 구비한 청소년수련관이 확대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련시설등록증 상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생활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청소년수련관의 본래적 설치 기준을 위배하고 운영 또한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관을 설치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

의 환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수련관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건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심 외곽지역을 선정하여 수련관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맞물려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어려워 수련관 내의 청소년 전용 공간보다는 수련관이 위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함에 따라 수련관의 본래적 역할과 기능보다는 청소년수련원에 가까운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 요건을 갖추도록 정부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재분류하여 ‘숙박형 청소년수련관’을 새로이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유스호스텔의 역할과 기능 회복을 위한 지도·감독 체계 강화

현재 유스호스텔은 80여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동시설의 기능과 역할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동법 8조와 관련한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유스호스텔의 경우 시설 리모델링을 통하여 그 설치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콘도 형태의 가족실을 둔 경우가 있다. 이에 유스호스텔의 역할과 기능 회복을 통한 청소년활동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위하여 동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청소년수련시설의 한국산업표준분류 재조정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거할 때, 숙박시설 설비 유무에 따라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또는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 준하는 세제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시설에 대한 산업표준분류 전환이 어렵다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숙박시설이 없는 청소년시설만이라도 교육서비스업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은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속에 7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청소년관계 전문가 및 종사자들은 수많은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고 추진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이 청소년정책을 발전시켜 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역할 속에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위치하였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미래사회의 변화 정도를 예측하면서 청소년 유형 및 계층별로 적실성 있는 새로운 과제 찾기에 몰두해 온 결과이다. 이 과정속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청소년정

책의 발전에 기초를 이루는 문제들, 예로 정책 전달체계 및 각종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한 문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앞에서 토론자가 언급한 두 가지 과제는 1990년대에 도입된 이래 큰 변화 없이 그 정책적 기초를 유지해 온 과제들이다. 그러나 새로운 과제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정책 도입기에 마련하여 시행해 온 하드웨어적 성격의 정책과제를 현 시점에 맞게 새롭게 구안하고 정비하는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토론자가 각종 청소년정책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과 책상 앞을 벗어나 지방의 청소년활동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체감한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소회이기도 하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토론회

박철웅

(백석대학교 청소년전공 교수)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기간은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등 청소년정책의 하드웨어가 집중적으로 구축된 시기로 평가 된다. UN 공공행정상 수상은 특기할 역사적 업적으로 평가되는데, 무엇보다 청소년참여정책을 지난 정부의 산물이라 가볍게 취급하거나 버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라는 점에서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터넷세대문제 관철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계의 쾌거로 평가할 만하다. 청소년육성기금의 고갈로 청소년계 근심의 불씨가 되었던 국립청소년시설의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국가청소년활동정책의 총괄 기능을 안정화시킨 것 역시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의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성과

Ⅰ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성과에 대한 체계적 서술 필요

- ▶ 특별히 제4차기본계획의 기본방향중의 하나인 통합적 청소년정책, 즉 가족·여성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한 성과 평가가 필요
-> 제5차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인 제4차기본계획 연속성 담보-가족여성 정책과 연계한 발전전략 지향의 전제

정책과제1-1)_ ②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Ⅰ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 청소년센터(가칭)로 개편하고 종합지원 기능 강화 및 설치확대 관련

- ▶ 향후 5개년 간 시·군·구별 최소 4개소 이상 확대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시·군·구에 일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 청소년수련관과 혼돈을 주는 내용이므로 전국 읍·면·동에 몇 개 또는 몇 % 이상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함
- ▶ 청소년시설유형별 총제적인 기능과 역할 재정비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

Ⅰ 청소년수련시설의 한국산업표준분류 재조정

- ▶ 현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은 한국산업표준분류(통계청)에 의거 숙박 및 음식점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청소년시설은 오락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교육서비스업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전환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조세감면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 준하는 세제혜택 법안 반드시 마련

Ⅰ 수련시설 안전점검종합평가 주기 강화(3년→매년) 및 종합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미 참여시설 처분보다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지원체제 마련을 통한 자구노력 유도 필요

- ▶ 최우수 시설은 격려차원의 해외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의 혜택부여와 다른 시설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발전 및 개설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지원 대책이 필요
- ▶ 평가사업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매년 변동되는 평가사업 수행기관을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및 관리와 함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정책과제1-1)_ 7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계획이 정책추진방향에 관한 언급에 그치고 정책계획이 없음.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보완 요망

- ▶ 국가제도로서의 수련활동인증제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와 운영시스템 개선 대책 필요

정책과제 5-2)_ 4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다원화

Ⅰ 「청소년교류센터」의 조직 및 기능 확대를 통한 청소년국제교류의 종합적 기능 수행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적 정책내용으로 평가됨

- ▶ 중앙부처 청소년교류업무를 담당했던 청소년교류과의 부재로 인해 글로벌 시대 청소년교류사업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청소년계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임. 청소년교류센터의 조직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서 일관성있는 정책수행을 위한 국제교류업무 총괄 조정기능 부여도 필요

정책과제 5-2_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 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무표준화,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추가
- Ⅰ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배치기준 강화 및 국비지원 확대(전체 수련시설) 추진-->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수정 필요

※ 기타 토의사항

- 정책 담당 중앙부처와 관련하여서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사업 외에 타 중앙부처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표기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당 부처의 업무로 확정된 내용인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토론문

송민경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정책의 목적은 국가적 차원의 개입 의지와 방향, 목표 설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갖추어나가는 데 있다. 청소년정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을 위한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개입 의지와 방향,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라는 거시적 청사진을 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를 그려낼 수 있다.

1993년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세워진 이후, 2013년~2015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을 제시하기까지 20여년의 청소년정책 역사가 마련되었다. 그간의 청소년정책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며 또한 여러 부처를 옮겨 다니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때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2008년~2012년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관부처의 변동이 많았으며, 따라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목표가 일관되게 진행되는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본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이와는 달리, 일관된 추진체계와 통합된 정책기조를 가지고 일정한 정책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제시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기본 골격은 제4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이나 혁신성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제4차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보다 강조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한 ‘가족 및 여성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이 제5차 기본계획에서도 역시 가족 및 여성정책과 연계한 발전전략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4차 기본계획에서의 ‘보편적 청소년정책’이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포괄적·균형적 청소년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선제적·실질적 청소년정책’을 제시하면서 미래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범부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국민이 공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진행될 청소년정책과제에서는 미래사회의 선제적 대응방식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은 미비하다. 특히,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논의에

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청소년정책의 기본 구상이 단위사업 중심의 투입체계를 기본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비전 제시 역시 모호하게 느껴질 소지가 다분하다.

둘째, 정책과제로 제시한 각 분야의 정책사업들이 전달체계나 운영체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연계 또는 조정, 관리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 각 사업이 운영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이나 기대효과, 단기적·장기적 차원의 사업 연속성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각 정책과제별 서비스 제공차원의 분야별 사업 운영주체 및 운영에 대한 고려뿐 만 아니라, 각 사업이 어떻게 유기적 또는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는지, 중복성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인프라차원의 구상과 구체적인 내용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단위사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만 진행되거나 지방정부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데 이들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총괄, 운영, 조정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청소년정책 대상별로 정책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5개년 계획안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적 지향점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정책을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추진전략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정책과제의 성과를 어느 시기에 기대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미 언급된 부분이지만,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도 역시 비슷한 양상인데, **제시된 서비스 또는 단위사업의 내용이 여전히 단조롭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독점화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사활동 및 사업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통합, 관리,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는 없다. 예를 들어,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활동진흥시설과 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Wee센터 및 Wee클래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아동센터 등 개별화된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지원서비스 연계 강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기관이 주축으로 또한 허브역할은 누가 할 것인지, 각 체계는 어떻게 조정 및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체계 또는 방안 등을 제시하거나 또는 예시된 바가 없다. 또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교육·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 데, 그렇다면 실제로 원스톱서비스 시설이나 기관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제시한 여러 부처의 기관이나 시설

등을 연계해서 이러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기능 강화, 전국 Wee센터 및 CYS-Net을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는 데,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한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제공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다른 원스톱지원센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호하다. 결론적으로, 사실 기관의 입장에서는 각 단위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전달체계 차원에서 각 단위사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기존에 제시된 기본계획과는 달리 혁신적으로 새롭게 제시된 항목들이 있다.

-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청소년센터’로 개편하고자 하는 데, 왜 개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 근거나 현장에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연결망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 구성 기관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설상담센터, 사회복지관,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정신과 의사 및 임상심리사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을 연계한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CYS-Net의 구성 기관이나 역할, 기대효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이나 정책 비전, 차별성 등에 대하여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CYS-Net 확대 및 강화,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는 데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 추진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주관주체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여 지원할 것인지, 지원할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의 명칭 변경**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더불어, **‘청소년여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개편하고자 하는 데, 이것은 여성가족부 산하인지 총리실 산하인지, 권한과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근거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전담과’를 설치하고 ‘청소년전담공무원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몇 가지 논의점을 언급하자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전담과’와 ‘청소년전담공무원제’가 도입된다면 이들의 역할과 권한, 주요 업무와 인력관리방식 등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도입한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어떻게 각 지방정부에서의 현안과 과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로 완전히 일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해 보인다.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직무표준화 및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의 처우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포함할 여지는 없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에서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지역사회까지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부처와 수행기관들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이름과 부처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로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등도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 권한 등이 산파적이고 분절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지방정부 부처와 연계된 주요 기관 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실정이다.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의견 및 제안서

이승렬

['12.10.24.(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정책을 구현하는 일선의 현장인 청소년수련시설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운영체계 재정비 및 보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① 사회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변화에 따른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명칭변경 및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지원
- ②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및 여가활동 기회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지원 확대
- ③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 지원 및 행정조치 등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 ④ 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별 운영형태가 각기 다르므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정체성 확립
- ⑤ 청소년정책을 구현하는 현장의 청소년수련시설과 국가정책사업 정보 등 소통 및 공유 창구 역할을 수행할 있도록 지원 및 제도 마련
- ⑥ 다문화 및 취약계층 부모, 맞벌이 부모를 위한 청소년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 시설 기반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적서비스 확대
- ⑦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 확보, 공적서비스 확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정책과제1-1)_ ②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 Ⅰ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 청소년센터(가칭)로 개편하고 종합지원 기능 강화 및 설치확대를 **청소년문화의집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센터(가칭)는 신규 건립으로 추진 필요**
 - ▶ 현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사회에 정착한 가운데 지역사회 청소년센터로 개편하게 되면 지역사회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혼란이 초래 될 것이며, 또한 현 청소년수련관과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 됨
 - ▶ 청소년시설유형별 총제적인 기능과 역할 재정비 필요
- Ⅰ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권역(지역)별 특성화(전문화)된 국립시설 확충에 따른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립시설 중심의 건립을 지양하고 민간시설 중심의 건립 운영과 청소년육구에 부응하는 최신 활동시설 설치 및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전환 필요**
 - ▶ 대규모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기 보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청소년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국립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역할분담확립 필요
 - 국립시설은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연수(보수 및 직무연수 는 유관기관별) 등 주력화
 -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은 청소년 사업 수행 및 서비스 지원 역할
- Ⅰ 수련시설 안전점검·종합평가 주기 강화(3년→매년) 및 종합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미 참여시설 처분보다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지원체제 마련을 통한 자구노력 유도 필요**
 - ▶ 평가결과 최우수 시설은 격려차원의 해외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의 혜택부여와 다른 시설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발전 및 개선헌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함
- 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진 청소년수련시설 확보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지원방안 강화
 -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실태(안전, 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집행을 위한 효율적이 효과적인 정보자료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 운영 실태 및 현황, 문제점에 대해 현장중심의 심층적인 분석, 진단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대내적·대외적 경쟁력 확보와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실현을 위한 현장 지원·관리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Ⅰ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개·보수 지원 확대

- ▶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장비 리모델링 정기적 추진 : 3~5년 주기
(시설 리모델링 : 5년 주기, 장비 보강 : 3년 주기)
- ▶ 지역 청소년들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모델 개발 지원

Ⅰ 민간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및 청소년정책 참여를 위한 대책마련
- ▶ 주5일 수업 등 주말 가족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방안 마련
 - ※ 민간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은 학교교육과정의 변화하면서 혼돈과 존립의 위기에 처해있음.

Ⅰ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수련활동비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들에 대한 주5일수업제, 창의적체험활동 참여 지원
- ▶ 민간 청소년수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비를 면제 해주는 비용 지원 마련
 - ※ 매년 청소년수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비를 면제해 주고 있어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또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 전국 청소년수련원에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수련활동비가 연 186억 원이 지원되고 있음.
 - ※ 국가가 사회약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정책방향이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금 조성 추진

- ▶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 인력의 전문화,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건립지원금 외 시설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한 운영지원금 관련 예산항목 설정 및 지원

- ※ 청소년을 직접 지도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가 안전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하기위한 처우 및 권익보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 청소년수련시설 경영의 어려움으로 청소년의 전문 지도활동보다는 일반인, 유아유치를 통한 수익이 수입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임.

Ⅰ 청소년수련시설의 한국산업표준분류 재조정

- ▶ 현 청소년수련시설은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거 숙박 및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교육서비스업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전환 추진
- ※ 추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조세감면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 준하는 세제혜택 법안 마련

정책과제1-1)_ 7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 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참여기관 대상 전환 등 추진방향의 혁신을 통한 활성화 유도
 -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성취포상제 등 내부시장보다 외부시장 참여유도 및 시장영역확대 등 청소년활동 저변확대 필요
 - ▶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청소년대상의 프로그램 추진 시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수련활동인증 취득 의무화
-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치

정책과제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 Ⅰ 청소년수련시설 중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인력 및 운영예산확보 지원을 통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안식처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게임방 운영시간 등 고려) 확대
 -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활동공간으로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보강하고 지역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하여 마을 단위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확보
- Ⅰ 청소년수련시설단체의 종사자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시간 교육 후 지역사회 유해환경감시 기능부여

정책과제5-2)_ [3]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Ⅰ 사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역할분담 확립

-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청소년정책전달체계로서의 기능보다 법에 명시한 사업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을 구현하는 현장으로 개선조치
-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 추진에 혼선과 많은 애로상황이 발생 되고 있음.
-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고 있음.
- ※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부분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등에 속하여 있거나 청소년수련관 활동의 일부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복지지원법에 의한 복지지원(상담중심) 사업수행,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활동진흥법에 의한 사업수행(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홍보활동, 정보제공 중심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사업 수행 및 서비스 지원 역할 확립

Ⅰ 지역중심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확립

- ▶ 청소년정책지역협의체를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각각 구성케 하되, 그동안 일반 행정공무원 중심으로 한 <협의회>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학교기관,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건강지원센터, 활동진흥센터, 상담지원센터, 기타 관련 기관단체의 네트워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안)에서 제시한 정책을 반영하되, 무조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지정·선정하기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유관기관 협의로 지정·선정하도록 함.
- ▶ 행정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청소년)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역량 있는 대표 청소년수련시설 및 기관 선정을 통한 정책 전달체계 구성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발족되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간의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이고 시·군·구 센터 역할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업무를 둔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과 맞지 않음

정책과제5-3)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Ⅰ 청소년법정기관·단체 역할 재정립

- ▶ 청소년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설립된 법정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하여 기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어 청소년정책을 구현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과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의 기존 사업보다 신규 사업개발 및 외부 시장영역확장에 주력화 필요

■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청소년단체활동을 중심으로 -

지세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장)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활동, 보호, 복지, 참여 등의 각 영역에서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청소년단체가 속한 활동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시설·인프라 확대 및 추진체계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청소년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늘 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들의 시각에서 본 이번 기본계획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한다.

■ 첫째는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에서 직능분야별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의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추진체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활동, 시설 등의 직능분야와 관련된 순수 민간단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들 민간단체들의 협의·조정 역할을 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같은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국의 각 시군구를 연결하는 추진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분산되어 있던 청소년 정책 및 관련자원의 '집중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지역의 민간 청소년단체와 시설이 구축한 잘 훈련된 지도교사, 지역단위 조직, 자원지도자 등과 같은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분야에 있어 정부조직과 함께 양측을 이루고 있는 민간 청소년단체와 시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체계 내에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물론 정부지원 산하단체나 기관들을 통한 수직적인 전달체계가 관련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의사결정과정을 일원화하기에는 매우 효과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각기 다른 이해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현장의 지지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전달체계와 함께 횡적인 면에서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적인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 체제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전달체계인 각 시군구의 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지원센터들과의 협력을 위한 직능별 민간 협의체들의 공식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Ⅰ 두 번째는 지역화 속에서 지방청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번 기본계획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기형적인 중앙집중식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등과 같은 변화로 지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인 것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각 시군구 지역사회 수준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에 있어 학교현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각급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각 시도별로 지방청협을 구성하여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청협의 설치를 조례로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7개 지방청협 중 청소년기본법과 지방조례규정에 의해 구성된 청협은 부산 청협, 인천 청협, 전북 청협과 광주 청협 4곳으로 나머지는 지역의 청소년단체와 유관기관들의 연대를 통해 자발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예산문제로 인해 활동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북 청협의 경우 매우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번 기본계획에 지방청협 설치의 전국적인 확대와 각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1:1 매칭 예산지원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Ⅰ 세 번째는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기본계획안의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중점과제인 청소년역량지수 개발과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등을 통해 2009년 미래형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청소년활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입학사정관제도, 수시입학 등의 입시교육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수련활동인증제도와 성취포상제의 활성화, 자원봉사활동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수준별로 등급화하고 영역화하는 노력과 함께 활

동결과를 정량적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의 청소년활동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현재 청소년활동에 있어 청소년단체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5개 회원단체의 청소년회원수 만해도 290만명으로 2011년 청소년인구 1,014만명을 기준으로 볼 때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기다 정부 각 부처에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370여개에 이르고,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법인도 1만여 개(9,701개, '11.3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법인)에 이른다. 또한 역사성에 있어서도 청소년단체활동은 현재의 청소년분야가 가지고 있는 체계와 틀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청소년단체활동은 이번 기본계획이 담고있는 단위활동인 역량개발, 진로체험, 인성함양, 자원봉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시적이고 집단적 단위의 종합활동이다. 반면에 수련활동인증제, 성취포상제, 자원봉사 등은 개인의 단위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 제안한다.

○ 청소년단체인증제 추진

지난 2012년 7월 ‘여가부-교과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간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MOU’ 체결로 2013. 3. 이후 청소년단체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할 예정이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단체들의 경우 체계적인 생활기록부 등재를 위한 행정력이 절대 부족하며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활동지도할 할 전문지도인력도 부족하다. 또한 지난 ‘12. 7. 한국청소년탐험연맹이 주관한 국토대장정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12. 8 한국소년탐험대 청소년캠프기간 중의 폭행 및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추락한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역량강화를 위한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따라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 중인 370여개의 청소년단체를 인증하여,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단체인증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단체활동의 생활기록부 등재를 위한 각 청소년단체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간의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과 창의적체험활동과 입학사정을 위한 청소년 개인별 기록관리 전자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활동역량을 강화해야한다.

○ 청소년단체활동 지원확대

지난 2005년 정부의 청소년관련 정책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면서부터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보호와 복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따라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계의 직능분야별 균형발전**을 위해 **청소년단체 대상 공모사업, 청소년단체 전문화 지원사업 추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외에도 현재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안정적인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소년활동시설의 위탁운영주체를 청소년 관련단체로 한정**해야한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청소년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해야한다.

○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도교사 가산점제 확대 및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배치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과제인 **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제의 대상단체 확대**를 위하여 각급 교육청과의 협력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도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재 학교현장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도교사 배출을 확대해 줌으로써 청소년단체활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밖에도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내 각종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상근 전문인력으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고민과 진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청소년상담사도 배치**하여, 학교현장에서 청소년활동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활동 현장에는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이념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단체가 설립되어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단체활동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청소년을 위한 역량개발, 참여·권리증진, 자립, 건강한 환경조성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꿈을 발견하며, 올곧게 성장해가는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